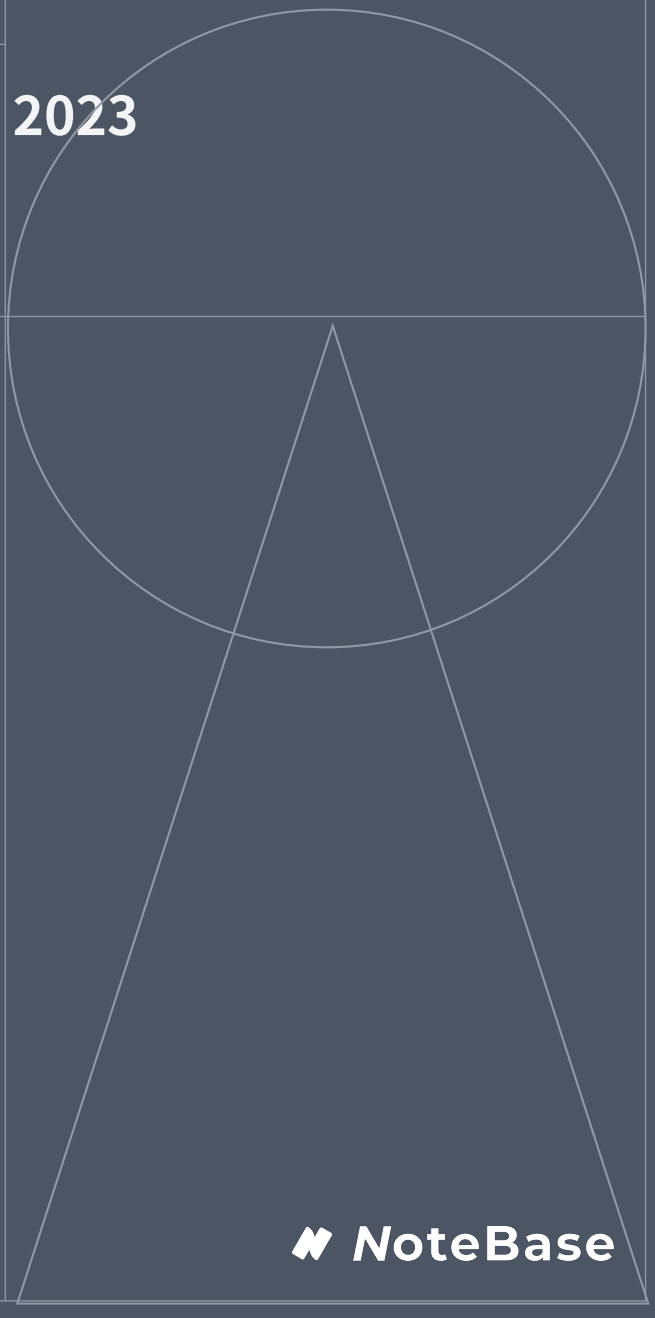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3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3

문 1. <보기>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포크의 의미를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포크를 선물로 받는다면 포크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①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②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③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④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같은 포크라도 그 문화의 상징을 아는지에 따라 선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처럼 행위자가 대상과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람들이 상징을 매개로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형성하고, 자신이 해석한 의미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는 미시적 관점이다.

① X: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의 설명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보고, 일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제시문은 사회 체계의 기능 이상보다 개인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② O: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이 이를 시험을 잘 보라는 응원으로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상황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반응**하는 사례이다. 반면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강조하는 주관적 의미 부여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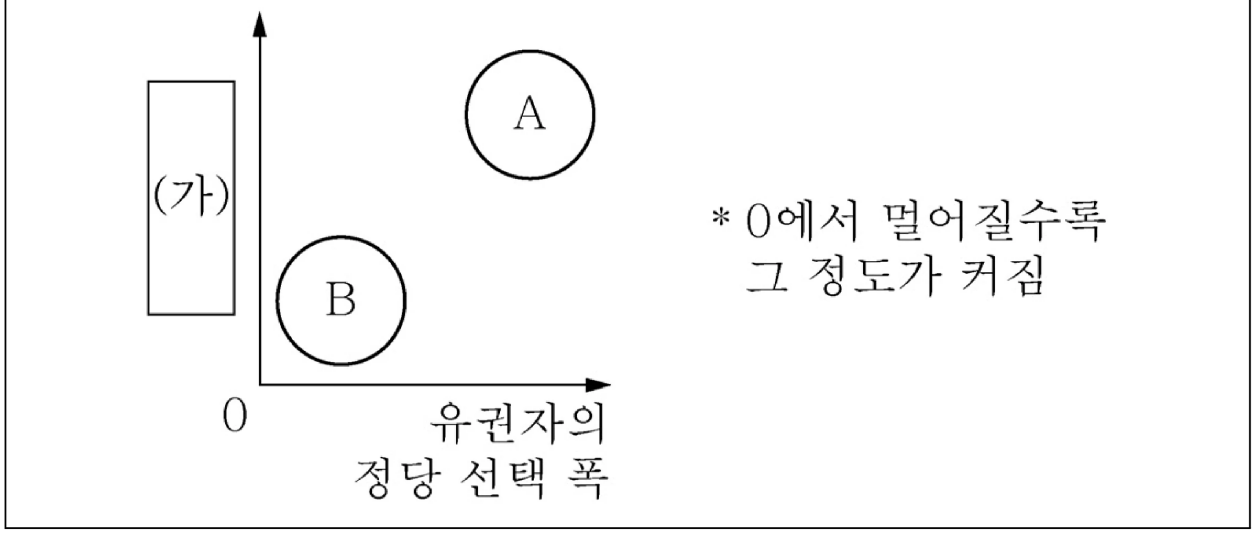
③ X: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의 설명이다. 갈등론은 사회에 내재한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제시문의 관점은 이러한 구조적 갈등보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미 해석과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④ X: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 같은 거시적 관점의 특징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 간 상호 작용과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관점이다. 제시문도 포크를 둘러싼 개인의 해석과 반응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2. <보기>의 그림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A, B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A는 B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② B는 A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③ B는 A에 비해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 (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 넓은 **다당제**, B는 두 주요 정당이 경쟁하는 양당제이다. 다당제에서는 대립하는 정당 외의 다른 정당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A는 B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 더 넓다. 따라서 A는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이고, B는 두 주요 정당이 정권 획득을 놓고 경쟁하는 양당제이다. 세로축도 0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커지므로, (가)는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어야 한다.

① O: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므로 두 정당이 대립할 때 **제3의 정당이 중재**할 수 있다. 반면 양당제에서는 두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대립이 형성되어 다른 정당의 중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② X: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은 B가 아니라 **A인 다당제**이다. 다당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러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양당제에서는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비교적 분명하다.

③ X: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B가 아니라 **A인 다당제**이다. 다당제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 소수 집단의 의견도 반영되기 쉽다. 양당제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두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수렴된다.

④ X: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다당제보다 **양당제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양당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의회 운영을 주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림의 (가)는 A가 B보다 큰 특성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처럼 다당제에서 상대적으로 큰 특성이 들어갈 수 있다.

NoteBase

문 3.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단지 유행이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된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① (가)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② (가)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③ (나)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④ (나)는 사회는 개인들 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는 유행을 개인들의 선택에 붙인 이름으로 보는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가 개인과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개인들이 옷과 음식을 선택한 결과를 '유행'이라고 부를 뿐이라고 본다. 이는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고, 개인과 별개인 사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명목론이다. 반면 (나)는 집단의 선망이 유행으로 나타나 개인의 선택을 이끈다고 본다. 이는 사회가 개인을 넘어서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이다.

① X: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가)가 아니라 (나)의 관점에 해당한다.

② O: 사회 명목론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의지와 행동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본다. (가)도 개인의 선택이 모여 유행을 이룬다고 보므로,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③ X: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인 (가)의 관점이다. 사회 실재론인 (나)는 반대로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제시문에서는 집단의 선망이 사람들에게 같은 옷과 음식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X: 사회가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형성된다는 설명은 개인을 사회 형성의 주체로 보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가 아니라 (가)의 관점이며, (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구속력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4. <보기>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힘에 의해 주도될 뿐이야.
·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① 갑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② 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③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④ 갑과 달리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을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공동 이익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갑과 달리, **국제 규범과 합의를 통한 협력**으로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갑은 국제 관계가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현실주의 관점이다. 을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화와 합의를 통한 공동 이익의 실현을 강조하는 이상주의 관점이다.

① X: 갑은 보편적인 선이나 도덕이 국제 사회를 지배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제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국가 간 힘의 관계**라고 본다.

② X: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 관계의 핵심 행위 주체**로 본다. 따라서 갑은 초국가적 행위 주체가 국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보다, 각국의 국력과 국가 간 세력 관계를 중시한다.

③ X: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힘의 차이가 국제 관계를 좌우한다는 갑의 현실주의에 가깝다. 을의 이상주의는 국제 규범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며, **국력과 관계없이 각국의 주권이 존중되는 국제 질서**를 지향한다.

④ O: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란 국가 위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세계 정부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을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보므로, **국제 규범과 제도를 통한 협력**으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갑은 국제 규범보다 각국의 힘과 자국 이익 추구가 국제 관계를 좌우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5.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	A
B	→	계약 공정의 원칙
C	→	D

<보기 2>

ㄱ.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와 과실 책임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현대 민법에서도 수정·보완되어 유지**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도식에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수정한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ㄴ. X: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는 B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는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B를 제한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ㄷ. O: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과실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며, 민법 제750조에 반영되어 있다. 현대 민법에서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만, **계약 자유와 과실 책임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두 원칙은 여전히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X: C인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D가 아니라 C인 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 무과실 책임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보기>의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산업화 과정에서 직장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대규모 인구층을 대중이라 부른다. 미개발된 도시에서 살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와 함께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한편, 근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대중 매체들이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 생산자들은 대중을 주목하여 ㉣문화 상품 생산에 뛰어들었다.

① ㉠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다.
② ㉡은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③ ㉢은 일방향 소통방식보다는 쌍방향 소통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④ ㉣에서는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대중문화 형성기에 발달한 전통적 대중 매체는 소수의 생산자가 다수의 수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일방향 소통**이 중심이었다. 쌍방향 소통은 인터넷 등 뉴 미디어의 대표적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산업화 과정에서는 기계와 공장제 생산이 확산되면서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었다. 적은 종류의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대표적인 생산 방식이었다.

② O: ㉡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는 소수의 지배층에 한정되었던 정치적 영향력이 대중에게 넓어지는 것을 뜻한다. 대중이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대중 민주주의가 형성될 토대가 마련되었다.

③ X: ㉢은 대중문화 형성기에 발달한 대중 매체를 가리킨다. 신문·라디오 등 전통적 대중 매체에서는 소수의 생산자가 다수의 수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수용자가 즉시 응답하거나 제작에 참여하기 어려운 **일방향 소통**이 주로 이루어졌다. 쌍방향 소통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인터넷 등 뉴 미디어의 특징에 가깝다.

④ O: ㉣ 문화 상품 생산에서는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상업성**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예술적 완성도 자체보다 많은 소비자의 취향과 구매 수요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다.

NoteBase

문 7.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종류	기관	해당 기관의 활동 사례
A	C	㉠ ○○광역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D	㉡ ○○광역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B	C	△△도 ◎◎시 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 주민청원을 심사하였다.
	D	△△도 ㉣ ◎◎시장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① 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② 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③ ㉢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주민청원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의견이나 요구를 문서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공적 기관에 요구 사항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광역시가 속한 A는 광역자치단체이고, 도에 속한 시가 제시된 B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주민청원을 심사하는 C는 지방의회이며, 돌봄서비스 시설 확장이나 꽃밭 조성을 추진하는 D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① X: A와 B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인 광역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모두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므로,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라는 구별이 잘못되었다.

② X: C는 **의결 기관**이고, D는 **집행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와 예산의 심의·확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같은 법 제116조). 선지는 두 기관의 역할을 서로 바꾸었다.

③ O: ㉢은 주민청원이다. 청원권은 공적 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 제출하고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헌법 제26조).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다(지방자치법 제85조 제1항). 따라서 반려견 화장터 설립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의회가 심사한 사례는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관련된다.

④ X: ㉠의 광역시 의회에는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이 없다**. 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확정 등의 의결권을 가진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16조). 한편 ㉣의 시장이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는 부분은 맞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이다(같은 법 제76조·제47조).

NoteBase

문 8. 일탈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보기>와 같이 분석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는 새로운 사회 규범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 가치와 규범의 혼란이 초래되고 그 결과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사회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사람들의 열망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탈과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①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②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④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규범이 혼란해지고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설명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일탈을 줄이려면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한다. 아노미는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혼란해져 개인의 행동을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기존 규범의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새로운 규범은 자리 잡지 못하면 개인의 욕망을 조절할 기준이 흔들려 일탈과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① O: 뒤르켐은 일탈의 원인을 규범의 혼란과 사회적 규제의 약화에서 찾는다. 따라서 구성원이 공유하는 규범을 확립하고 사회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의 욕망과 행동을 조절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을 대책으로 강조한다.

② X: 뒤르켐의 이론은 일탈을 판단하고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 규범을 전제한다. 문제는 일탈 판단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낙인 이론이 강조하는 일탈의 상대성도 사회적 판단 기준 자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타인과 상호 작용하면서 일탈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일탈을 학습한다는 설명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이러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사회 규범의 혼란과 통제력 약화에 주목한다.

④ X: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머튼은 사회가 권장하는 목표와 이를 합법적으로 달성할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을 유발한다고 보므로, 목표를 달성할 합법적 기회를 넓히는 것을 대책으로 본다. 반면 <보기>의 뒤르켐은 규범의 혼란과 사회적 규제의 약화를 원인으로 본다.

NoteBase

문 9.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 이론	A	B
(가)	예	아니요
(나)	아니요	예
(다)	예	예

① A가 계층론이면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A가 계층론이면 (나)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B가 계급론이면 (가)에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다)에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계층론은 사회 계층 구조를 **연속적인 서열**로 보고, 계급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불연속적인 계급**으로 구분한다. A가 계층론이라면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에 대한 응답은 '아니요'이므로, A의 응답이 '예'인 (가)에 들어갈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가)는 A만 '예', (나)는 B만 '예', (다)는 두 이론 모두 '예'로 응답하는 질문이다. 각 선지가 가정한 A와 B의 이론을 먼저 정한 뒤,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 표와 맞는지 확인한다.

① X: A가 계층론이면 B는 계급론이다. 계층론은 소득·직업·권력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사람들의 위치를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한다. 반면 계급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처럼 경계가 뚜렷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에 계층론은 **'아니요', 계급론은 '예'**로 응답하므로, 표의 (가)에 제시된 A '예', B '아니요'와 반대이다.

② O: A가 계층론이면 B는 계급론이다. 계급론은 같은 계급의 구성원이 공통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계급 의식**을 형성한다고 본다. 계층론은 여러 기준에 따른 서열을 다루므로 같은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한 계급 의식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응답이 A '아니요', B '예'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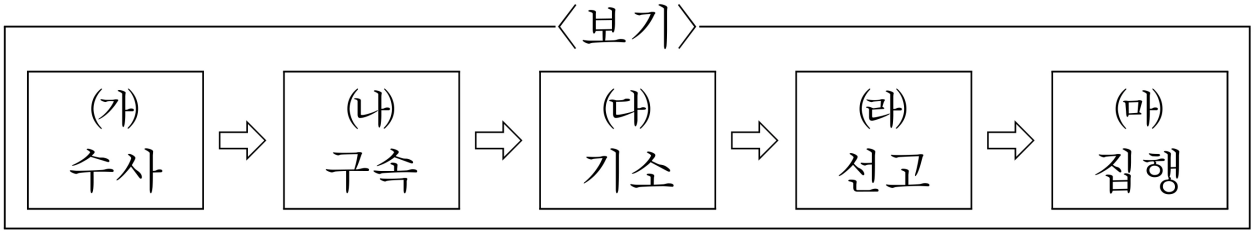
③ O: B가 계급론이면 A는 계층론이다. 지위 불일치는 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학력은 높지만 소득은 낮은 경우가 그 예이다. 계층론은 **불평등을 여러 차원에서 파악**하므로 이를 설명하기 쉽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경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는 계급론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A '예', B '아니요'인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④ O: 계급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와 그에 따른 경제적 관계를 사회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본다. 계층론도 재산·소득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며, 여기에 사회적 위신이나 권력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즉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점은 두 이론의 공통점**이므로, A와 B가 모두 '예'로 응답하는 (다)에 들어갈 수 있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형사 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가)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② (나)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④ (라)는 판사에 의해, (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의 선고는 **판사가 판결 내용을 알리는 절차**이다. 선고된 형은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이다.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뿐 아니라 **고발·자수·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등을 계기로도 개시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이라는 제한이 잘못되었다.

② X: (나)는 구속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받기 위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 대상은 검사가 아니라 **관할법원**이다. 법원이 심사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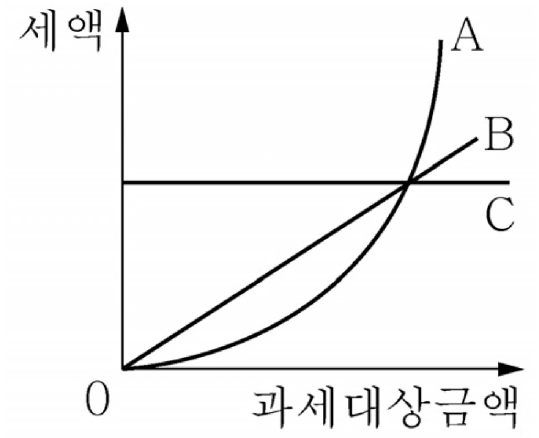
③ X: (다)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이다. 기소 후 공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판사는 증거를 심리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충분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④ O: (라)는 선고, (마)는 집행이다. 선고는 판사가 판결의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제43조). 선고된 형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이루어지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같은 법 제459조·제460조). 선고를 담당하는 판사와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A~C는 각각 조세부과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C는 비례세이다.

② A와 B는 둘 다 누진세이다.

③ A와 B 중 A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B형태로 부과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세액도 늘어나는 **비례세**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도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일정한 1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B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래프의 가로축은 과세 대상 금액, 세로축은 세액이다. 누진세와 비례세를 구분할 때는 세액이 늘어나는지만 보지 않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야 한다.

① X: C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해도 세액이 일정한 수평선이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이다. 과세 대상 금액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낮아지므로 역진적인 성격을 띤다. 비례세는 세액 자체가 아니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B이다.

② X: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세액의 비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이다. 반면 B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두 배가 되면 세액도 두 배가 된다. 따라서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이다. 세액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누진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금액이 큰 구간, 즉 교점 오른쪽에서는 A가 B보다 위에 있다. 같은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A의 세액이 B보다 많으므로** 고소득층에는 A보다 B가 더 유리하다. 교점 왼쪽에서 A의 세액이 더 적다는 사실을 고소득층의 부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④ O: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커져도 **적용 세율은 일정**하므로,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B 형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만 16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자 을(乙, 만 35세)과 체결하였다. 을(乙)은 다음날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 병(丙,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丁, 만 43세)과 체결하였다.

①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③ 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병의 용돈은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 참고서를 사는 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5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는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도 취소권을 인정한다.

② X: 갑이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을이 확답을 촉구할 상대방은 **갑의 법정 대리인**이다. 민법 제15조에 따라 을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는 의사표시이다. 갑 본인에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갑이 성년이 되는 등 능력자가 된 후이다.

③ O: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사례의 용돈은 이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병이 **용돈 범위에서 참고서를 구매한 계약**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따라서 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반면 갑의 고가 스마트폰 매매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취소 가능한 계약이다.

④ X: 참고서 매매는 책을 받을 권리를 얻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민법 제5조 제1항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의 계약이 별도의 동의 없이 유효한 이유는 단순히 이익만 얻기 때문이 아니라, 처분을 허락받은 용돈의 범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 ㉡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 법칙을 따르며, 성인과 청소년 간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보기>
A기업은 최근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받던 X재 가격을 ㉠성인에게는 5% 인상하고, ㉡청소년에게는 5% 인하하였다. 이후 X재의 판매 수입 변화를 살펴보니 성인과 청소년 각각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에게서 나타난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②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에 비해 ㉠이 더 크다.

③ 가격 변경 후 ㉠과 달리 ㉡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④ 가격 변경 전에 비해 가격 변경 후 X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X재는 수요 법칙을 따르므로 가격이 오른 ㉠ 성인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린 ㉡ 청소년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량도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판매 수입은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판매 수입의 변화는 가격과 판매량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 X: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을 절댓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 성인에게 가격을 5% 올렸는데도 판매 수입이 증가한 것은 수요량 감소가 판매 수입에 미치는 효과보다 가격 상승의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의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1 미만인 비탄력적 수요**이다.

② X: ㉡ 청소년에게는 가격을 5% 내렸는데도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격 하락으로 줄어드는 수입보다 수요량 증가로 늘어나는 수입이 더 컸다는 뜻이므로, 청소년의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수요이다. 성인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탄력성은 ㉠ **성인보다** ㉡ **청소년이 더 크다**.

③ O: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관계이다. ㉠ 성인에게는 가격을 5% 인상했으므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 청소년에게는 가격을 5% 인하했으므로 소비량이 증가한다. 두 집단 모두 판매 수입은 늘었지만 **소비량의 변화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④ X: X재의 전체 판매량은 성인의 판매량과 청소년의 판매량을 합한 것이다. 성인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청소년의 판매량은 증가하지만, 두 집단의 기존 판매량과 실제 증감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판매량의 증감은 알 수 없다**. 두 집단의 판매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은 전체 판매 수입의 증가를 뜻할 뿐, 전체 판매량의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유럽이 동양과 서양을 문맹과 문명, 야만과 지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틀을 말한다. 이 틀에 따르면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은 미지의 신비로운 곳이며,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사회로 간주해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문명이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나)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검정 면바지'보다는 '블랙 코튼 이지 팬츠'를, 또 그보다는 'black cotton easy pants'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① (가)는 각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한다.
② (나)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③ (나)는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는 같은 옷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높게 평가하므로, 외국 문화를 자기 문화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태도가 심해지면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보아 **문화적 주체성과 전통 문화를 잃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서양 문명을 우월하게 보고 동양을 미개한 사회로 평가하므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각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② O: (나)는 옷 자체가 같은데도 영어 표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외국 문화를 자기 문화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이다. 외국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자기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면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

③ X: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가)의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고, 자기 문화를 다른 사회에 강요하거나 그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④ X: (나)뿐 아니라 **(가)도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가)는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며, (나)는 외국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우열을 매기는 방향은 반대이지만, 모두 문화 간 우열을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A와 B는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인 공직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여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A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편, 시민은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① A는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② B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C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④ C와 달리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A는 **정당**이다. 정당 중 여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를 연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A는 정당,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려는 B는 이익 집단,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C는 시민 단체이다.

① O: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고, 집권하면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참여한다. 특히 **여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과 입법 과제를 협의하므로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② X: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실천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지지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당을 평가한다. B인 이익 집단은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집단으로, 정당처럼 공약과 집권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다.

③ X: C인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집단은 정당이다.

④ X: B인 이익 집단뿐 아니라 **C인 시민 단체도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익 집단은 주로 구성원의 이익을 기준으로, 시민 단체는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므로 'C와 달리'라는 구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는 특정 기관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① A의 장(長)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A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③ ㉠인 경우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의 결정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제로 시행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A는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이므로,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A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이다.

① O: 헌법 제6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한다.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이므로,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 탄핵심판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② X: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을 갖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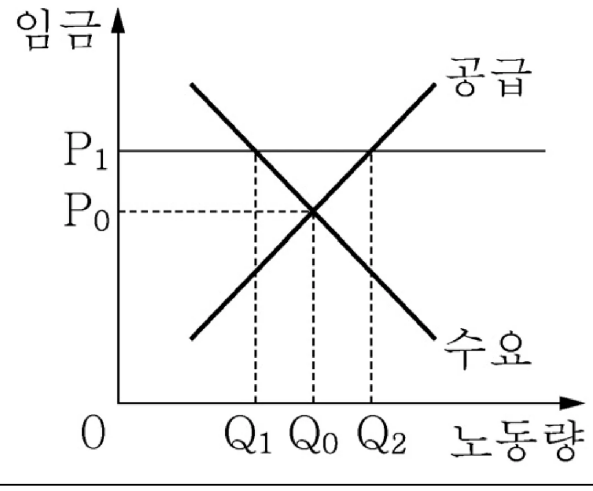
③ X: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입법자가 이를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다.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고 **계속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X: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한 형태로,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것과 결정에 9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르다.
만장일치는 요건이 아니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을 P_1로 설정하여 규제할 경우 노동 시장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실업의 규모는 $Q_0 - Q_1$이다.

② 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③ 규제 전과 규제 후의 총잉여 크기는 같다.

④ 규제 후 고용량은 Q_0과 Q_2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사는 소비자는 기업이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최저 임금이 적용되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오르고 고용량은 줄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세로축은 임금, 가로축은 노동량이다. 규제 전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임금이 P_0, 고용량이 Q_0으로 결정된다. 임금 하한선 P_1은 균형 임금보다 높으므로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 임금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은 Q_1, 근로자의 노동 공급량은 Q_2이다.

① X: 실업 규모는 일하려는 노동 공급량에서 실제 고용량을 뺀 $Q_2 - Q_1$이다. $Q_0 - Q_1$은 규제 전보다 **줄어든 고용량**이므로, 임금 상승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공급 증가분 $Q_2 - Q_0$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O: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수요자이고 근로자는 공급자이다. 따라서 여기서 **소비자 잉여는 기업이 얻는 잉여**로, 기업이 노동에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차이이다. 그래프에서는 실제 고용량까지 수요 곡선 아래이면서 임금선 위인 면적에 해당한다. 임금이 P_0에서 P_1로 오르면 고용하는 노동에 대한 잉여가 줄고, 고용량도 Q_0에서 Q_1로 감소하여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③ X: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며 규제 후에는 **감소한다**. Q_1과 Q_0 사이에서는 기업의 지불 의사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근로자의 최소 수취 의사를 나타내는 공급 곡선보다 위에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고용은 양측에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임금 하한선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

④ X: 규제 후 고용량은 Q_0과 Q_2 사이가 아니라 Q_1이다. 근로자들이 Q_2만큼 일하려 해도 기업이 고용하려는 양은 Q_1뿐이므로, 실제 고용량은 **더 적은 쪽인 노동 수요량**에 의해 결정된다.

NoteBase

문 18.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X재와 Y재 각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교역에 따른 운송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

	X재	Y재
갑국	20명	30명
을국	40명	30명

① 갑국은 X, Y재 생산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②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③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 후 1:1로 교환하면 을국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Y재 1단위에 투입되는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가 Y재의 기회비용이다. 그 양은 갑국이 $\frac{30}{20} = \frac{3}{2}$단위, 을국이 $\frac{30}{40} = \frac{3}{4}$단위이므로, 갑국의 기회비용이 을국의 **2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수치는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이다. 절대 우위는 같은 재화를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우이며, 비교 우위는 다른 재화로 표시한 기회비용이 더 낮은 경우이다. 한 재화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에 투입한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다른 재화의 양이므로, 해당 재화의 필요 노동자 수를 다른 재화의 필요 노동자 수로 나누어 구한다.

① X: X재는 갑국이 20명, 을국이 40명을 필요로 하므로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그러나 Y재는 양국 모두 30명이 필요하여 **생산성이 같다**. 갑국은 X재에만 절대 우위가 있다.

② X: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frac{20}{30} = \frac{2}{3}$단위, 을국이 Y재 $\frac{40}{30} = \frac{4}{3}$단위이다. 갑국의 기회비용은 을국보다 큰 것이 아니라 **을국의 절반**이다.

③ O: 갑국에서 Y재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30명을 X재 생산에 투입하면 X재 $\frac{30}{20} = \frac{3}{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을국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X재 $\frac{30}{40} = \frac{3}{4}$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X재 1.5단위, 을국이 X재 0.75단위로,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④ X: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는 갑국이 X재, 을국이 Y재이므로 각각 이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을국이 Y재 1단위를 포기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X재는 $\frac{3}{4}$단위이다. 그런데 1:1 교환에서는 Y재 1단위를 수출하여 X재 1단위를 얻으므로, 직접 생산할 때보다 X재를 $1 - \frac{3}{4} = \frac{1}{4}$단위 더 얻는다. 따라서 **을국에도 교역 이익이 발생한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국은 무역 호황으로 인해 외화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의 물가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갑국의 중앙은행은 ㉠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 을(乙)국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을국 정부는 ㉡ 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을국 중앙은행도 ㉢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① 국공채 매각은 ㉠에 해당하는 수단이다.
② ㉡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③ 지급 준비율 인상은 ㉢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은 갑국의 실질 GDP 증가 요인, ㉡은 을국의 실질 GDP 감소 요인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갑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므로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시중 자금을 중앙은행으로 흡수하여 통화량을 줄인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과 소비·투자 위축을 유도하여 총수요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수단이다.

② X: ㉡은 세금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는 **확장 재정 정책**이다. 소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여 총수요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한다. 긴축 재정 정책은 이와 반대로 조세를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③ X: ㉢은 을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부응하는 확장 통화 정책이어야 한다.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지급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의 비율이다. 이를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과 통화 창출이 제약된다. 따라서 인상은 긴축 수단이며, ㉢에 해당하는 수단은 **지급 준비율 인하**이다.

④ X: ㉠과 ㉡의 효과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의 긴축 통화 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여 총수요를 줄이므로 단기적으로 갑국의 **실질 GDP 감소 요인**이다. 반면 ㉡의 확장 재정 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총수요를 늘리므로 단기적으로 을국의 **실질 GDP 증가 요인**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기본권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예	아니요
소극적 · 방어적 성격의 권리인가?	A	B, C
(가)	B	A, C

① (가)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가)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라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③ B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면, (가)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A는 B, C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현대적 권리이므로, B가 사회권이라면 (가)의 질문에 B만 '예'라고 답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지닌 A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B와 C는 사회권과 청구권 중 하나이며, 어느 것이 사회권인지는 각 선지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① X: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을 가리킨다.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기 위한 바탕이 된다. 문제의 A~C에는 평등권이 없으므로 이 질문을 넣으면 B만 '예'로 분류할 수 없다.

② X: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므로, 이 조건에서는 B가 청구권, C가 사회권이다. 청구권은 재판 청구 등을 통해 기본권을 실현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권리이고,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B와 C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B만 그렇다고 구별할 수 없다.

③ O: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속하므로, B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적 권리**이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에는 B만 '예', 자유권인 A와 청구권인 C는 '아니요'가 되어 표의 구분과 일치한다.

④ X: A인 자유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다고 보는 천부적 권리로,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도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둔다. 따라서 자유권을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라고 설명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NoteBase